

공공행정

- 01 |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02 |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A to Z』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 03 |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지원사업 3년연장
- 04 | 훼손된 GB의 공원녹지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 05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규제개선
- 06 | 개발제한구역 수질관련 해제기준 완화



2023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집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추진부서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031-729-2932

개선배경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어린이집과 교육부 유아교육 유치원 학사일정은 3월 개원, 다음 해 2월 졸업(수료)은 동일하나, 하반기 출생자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2월 말, 유치원 교사는 다음 해 2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어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정년)이 이원화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으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이 재원아의 졸업(수료)을 2개월 남기고 교체되어 불안정한 보육환경 조성

개선내용



- 어린이집 재원 아동들이 담임교사와 졸업(수료)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일자 변경: 12월 → 다음해 2월 (유치원 교사와 동일)



개선 전

보육사업안내(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조리원(조리사)은 만65세)까지 지원하고,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상한 연령에 도달하는 해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상반기 출생 대상자는 6. 30. 기준, 하반기 출생 대상자는 12. 31.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개선 후

보육사업안내(지침) 내 '인건비 지원 원칙'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통적용사항을 준용하여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원장 만65세(단,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만70세), 보육교직원 만60세까지 지원(출생월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말 기준,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2월말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만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특례적용 가능(단, 관리철저)

* 2023년에 만60세가 되는 보육교직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용

1963년생	현행기준	개정기준	'23년 예외적용
1.1.~2.28.	'23.6.30.	'23.2.28.	'23.8.31.
3.1.~6.30.	'23.6.30.	'23.8.31.	
7.1.~8.31.	'23.12.31.	'23.8.31.	'24.2.28.
9.1.~12.31.	'23.12.31.	'24.2.28.	

추진과정



- '22. 9.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개정 건의
- '22.10. 규제개혁신문고 보건복지부 답변 → 중장기 검토
- '23. 3. 『2023년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 시행(인건비 지원 기준) 및 규제개혁신문고 보건복지부 재답변 → 수용

개선효과



- 반 편성 및 학기 운영 시기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전국 시군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확산 · 적용

* 유보통합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김말희 ☎ 031-729-2932

2004년 성남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20여년 만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 상은 그동안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어온 성남시 직원들이 이뤄낸 값진 성과물로, 다만 제가 대표해서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개혁함으로써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및 『보육사업 안내』(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은 불합리했습니다. 어린이집 학기는 매년 3월에 시작해서 다음 해 2월에 끝나지만, 정년으로 출생 월이 7월에서 12월까지인 보육교직원은 12월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학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과 교육부 유치원 학사일정은 3월 개원, 다음 해 2월 졸업으로 동일하나,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은 달랐기에 이원화되어 있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기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 및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한 노력 끝에, 지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아이들이 담임교사와 졸업까지 함께 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 일자가 보육교직원의 출생일이 3월에서 8월까지의 출생자는 8월 말 기준으로, 9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의 출생자는 다음 해 2월 말 기준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린이집 학기 운영 시기를 연계하여 공백없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동은 교사와의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교사는 책임감 있게 반 운영을, 보호자는 아이를 믿고 맡기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듯이,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A to Z』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추진부서 | 양주시 건축과 ☎ 031-8082-6655

개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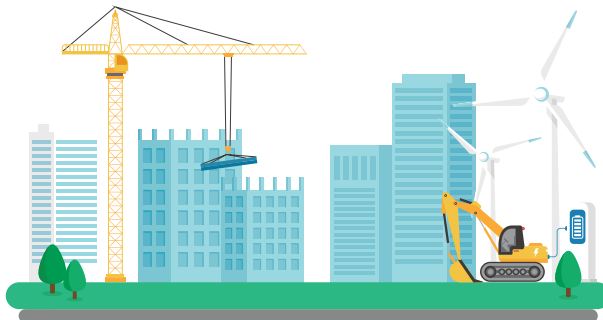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했던 규정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법상 29종의 건축물 용도를 비슷한 용도별로 9개의 시설군으로 묶어 같은 군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고제가 아닌 건축물표시변경 대상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대행사가 아닌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함.

예)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 산업 등 시설군에는

[가.운수시설, 나.창고시설, 다.공장, 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자원순환관련시설, 바.묘지시설, 사.장례시설]이 있으며 가~사는 같은 시설군으로 시설상호간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표시변경신고 대상임.

- 그 동안 건축물표시(용도)변경 신청은 민원인이 시청을 직접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 후 간단한 변경일 경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해 왔으나, 그 밖의 건은 변경 도면 등 구비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어, 상당수가 대행사를 통해 민원서류를 제출함.
- 이러한 경우, 시청 방문 이후 대행사에서 민원서류 구비부터 민원처리까지 최소 15일 이상 소요되고 건당 약 1 ~ 3백만원의 설계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규제 완화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개선 전

● 민원처리 절차

- ① 민원인 시청 건축과 방문
 - ②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담당자)
 - ③ 민원인 대행사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④ 시, 민원처리
- ※ 대행사에 요청시 처리 기간 20일 이상 소요

● 대행료

- 2022년 총 민원 처리 건수 : 407건
- 대행료 : 건당 1~3백만원 소요
- 2022년 민원인 부담 대행료 : $407 \times 200\text{만원} = \text{약 } 8.14\text{억원}$



개선 후

● 민원처리 절차 단축

- ① 민원인 시청 건축과 방문
- ②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 작성
- ③ 시, 민원처리

● 대행료 절감

- 2023. 1. ~ 6. 30일까지 실적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187건 중 78건 ONE STOP 서비스 실시
- 대행료 절감액 : $78 \times 200\text{만원} = \text{약 } 1.56\text{억 절감}$

〈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 〉



민원인 방문 상담과 동시에 신청서류 작성 및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상승



민원인 방문 상담과 동시에 신청서류 작성 및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 상승

추진과정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담당자들과 함께하는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작성부터 처리까지 ONE STOP 서비스"를 통해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부터 변경 도면을 직접 CAD 등을 활용해 작성 및 수정하여 민원처리("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건축직공무원은 건축물 현황도 작성 가능)
- 그동안 대행사를 통해 접수하였던 민원을 시청에 직접 방문 및 접수하도록 유도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경

'23.01.01. 건축물표시변경 ONE STOP서비스 시행

'23.08.28. 건축물표시변경 ONE STOP서비스 추진계획 보고

개선효과



- 민원처리 절차 단축


→ ④단계에서 ③단계로 단축됨에 따라 10일 이상 기간 단축

- 연간 처리건수 400건 중 40%인 160건 ONE STOP서비스 시행 시 약 3억2천만원의 민원인 부담 대행료를 절감할 수 있음



건축물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로 행정절차 간소화, 민원만족도 Up!



 경기도 양주시 건축과 최소윤 ☎ 031-8082-6655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ONE STOP 서비스는 건축 관련 업무를 오래 해오신 과장님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행사(설계사무소)를 통하여 표시변경을 진행할 경우, 민원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발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담당자와 함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전원 오토캐드(AutoCAD)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의 지지와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팀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서비스였습니다.

건축물 표시(용도) 변경 무료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시청을 방문하시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공한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단축된다는 말에 긍정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민원인분들이 한껏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실 수 있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또한 담당자는 도면을 직접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면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다르게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문에 민원인분과 함께 신청서 작성 시 변경될 도면에 대한 파악은 필수입니다. 앞으로도 건축과를 방문하시는 민원인 분들이 표시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도비 지원사업 3년연장

 추진부서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 031-8008-3497

개선배경



- 기존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비용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제16416호, '19. 4.30.)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2.12.31.일까지 유효한 일몰사업임
 - 지원규모 : 동당 4천만원(국비1:지방비1:자부담1 균등분담)
-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사업장 운영의 제한 및 방역관련 문제로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시점 확보가 어려워 사업접수 및 추진 일정이 지연
- 또한, 보강의무가 발생된 어린이집, 학원 등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등으로 공사착수가 여의치 않은 상태임에도 벌칙* 규정에 따라 다수의 범법자 양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

* '22.12.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에게 벌칙규정 적용

개선내용



-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던 경기도 및 전국의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건축주 경제적 부담 경감
- 「건축물관리법」 개정

개선 전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개선 후

**제29조의2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여야 한다.

개선 전

- ③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는 경우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 ④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부칙<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개선 후

- ③ 삭제
- ④ 삭제
- ※ 부칙<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추진과정



'21.12.31. 건축물관리법 개정 건의(→국토부)

* 이후 국토부 방문건의('22.5.24.) 및 공문건의('22.6.13.) 추가실시

'22. 9.16.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국회 유경준 의원 등 10인)

'23. 4.18.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공포(제19367호)

※ 개정사항 : 부칙<법률 제19367호, 2023. 4. 18.>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개선효과



- 도내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약300동(전국 2,106동)에 사업비 지원을 통해 보강사업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건축물관리자의 비용부담 완화

훼손된 GB의 공원녹지 복구를 위한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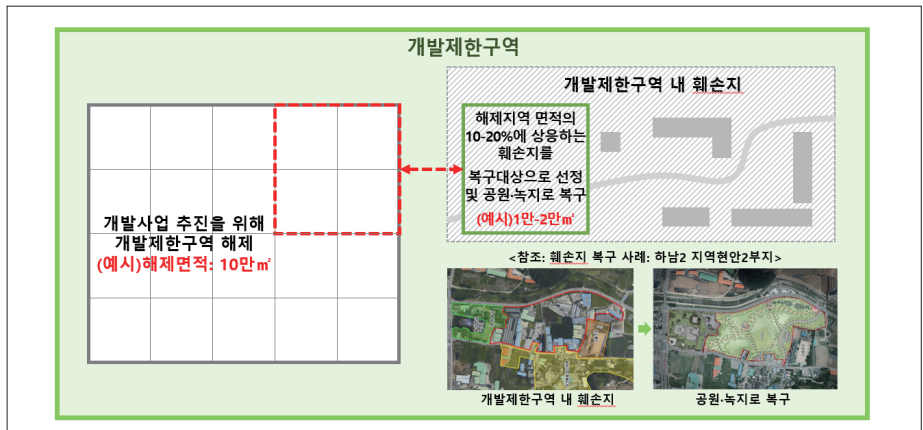
추진부서 | 경기도 공간전략과 ☎ 031-8008-6165

개선배경



- GB 해제사업 시 사업시행자는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여야 하나, 복구대상지 부재 등을 사유로 법적 최소 수준(10%)*으로만 복구하거나,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등으로 개발이익의 도비 환수 미흡
 - * '09~'19 훼손지 복구사업(37개 사업 : 복구사업 25건, 보전부담금 12건) 중 평균 복구비율 11%
 - ** 보전부담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국비)로 귀속되며, 국비 납부액 대비 도 지원액은 33.4%('17~'21, 납부액 5,700억원/지원액 1,900억원) 수준으로 도의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 효과 미미

〈 훼손지 복구계획 예시 〉



☞ 보전부담금을 지양하고, 3기 신도시에 대해 복구면적을 15%이상 확보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법령개정을 통해 복구대상지 확대를 추진

개선내용



개선 전

훼손지 복구 대상지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내 장기미집행공원이 대상'으로 한정.



개선 후

복구대상지를 '대(垜)·공장용지·창고용지 및 잡종지'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불법 물건 적치지역'을 추가하여 확대

추진과정



- '20. 8. 제도개선 방향 보고
- '21. 2. / 4. 국토부 회의 및 방문 건의
- '22. 5.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입법(정부) / 6.10 개정 / 12.11. 시행
훼손지 복구계획 시행령개정(안) 마련 및 개정 건의(공문)
- '22.1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시행

개선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 보전하고, 불법 적치물 정비를 통한
효과적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가능해지고, 광고산에서 군포 수리산, 부천 성주산
등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 등 주요 녹지축을 복원할 수 있는 실행력이 확보될 것임
- 또한, 훼손지 복구사업 확대를 통한 도시민을 위한 공원녹지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GB해제 사업(약 34km²)에 대한
해제조건으로 GB내 훼손지 약 5km²를 공원녹지로 조성예정

〈 00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및 복구계획 조감도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규제개선

 추진부서 | 경기도 교육협력과 ☎ 031-8008-4812

개선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보조의 신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편성지침(308-08)에 각급 학교로 보조하도록 되어있어 교육청·교육지원청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없었음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군·자치구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통계목 부재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별표11]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통계목 (308-08) 개선으로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교육기관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통계목(308-11)을 신설하여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을 원활하게 하였음. 특히, 기존 교육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회계분리 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사업집행 및 정산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큰 역할을 함

개선내용



개선 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1. (308-08) 시·도 및 시·군·자치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로 보조**
 2.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통계목 부재로 시·군·구-교육청 협력사업추진 불가



개선 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6조 [별표11]
1. (308-08)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직접 또는 교육감·교육장을 통하여** 각급 학교로 보조
 2. (308-11 신설) 시·군·자치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로 협력사업 추진 가능

추진과정



- '22.5.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건의 요청(1차)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 '22.5.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건의 요청(2차)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 '23.2.1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건의 요청(3차)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
- '23.2.2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송부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
- '23.7.3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
 - 시·군·구 비법정전출금 예산과목 신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개선

개선효과



-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출금 통계목 신설로 시·군·구-교육청 협력사업 추진 가능해졌음
- 또한, 시·도 및 시·군·구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조가 가능해짐으로써,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가 원활해 졌으며, 예산보조를 받는 학교는 하나의 회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 무엇보다 전국 508,850명의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더 이상 자치단체 재원과 교육청 재원의 회계분리로 인한 업무 혼란 및 행정 낭비를 격지 않게 되었음



개발제한구역 수질관련 해제기준 완화

 추진부서 | 경기도 공간전략과 ☎ 031-8008-6161

개선배경



- 모든 개발제한구역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의 환경관련 항목을 1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고, 그중 최고 등급으로 종합등급이 결정되는데, 종합등급이 1~2등급인 경우는 해제가 불가함
-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지역들은 다른 지표와 상관없이 수질 1~2등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음. 왜냐하면 물환경 목표기준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종권역별로 고시하는데, 팔당지역은 당연히 목표기준과, 이와 연동되는 폐수배출시설 배출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대상지의 훼손상태나, 보전 필요성 등과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하여 정비나 계획적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렇게 해제가 불가한 수질 1~2등급지는 경기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 1,157km² 중 22%인 약 246km²에 달함

〈 구리시내 한강변 1~2등급지내 훼손 현황 〉



☞ 수질은 개발로 훼손되는 농업·임업·식물상 등 타 평가항목과 달리, 적절한 개선대책을 통해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개선내용



개선 전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



개선 후

수질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해제 대상지역 전체 및 주변지역에 대해 **해제 및 그로 인한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해제할 수 있음**

추진과정



- '22. 7.18. 불합리한 GB 환경평가등급 등급 사례조사
- '22. 8.23. GB환경평가등급(수질) 제도개선(안) 마련 및 방침결정
- '22. 8.23. 국토부 방문 제도 개선사항 설명 및 협의
- '22. 9.30. GB환경평가등급(수질) 관련 제도개선 건의(道⇒국토부)
- '22.12.22. GB해제 제도 개선 국토부-시·도 과장급 회의
- '23. 7.2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시행

개선효과



- 수질 1~2등급지가 대부분인 경기동북부 팔당지역 개발사업이 적절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만 수립을 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짐
- 경제적으로는, 구리, 하남시 등 경기 동북부에서 사업진행이 불가능했던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기대됨
- 환경적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적절한 수질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으로 불법 난개발된 개발제한구역이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며, 수질개선 기술도 더욱 발전하게 되면서 팔당상수원에 대한 효과적인 수질관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